

“버스에서 ‘노 마스크’ 아직은 눈치 보여요”

2년5개월만에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 첫날 풍경

코로나 걱정 여전하고 미세먼지에 승객들 대부분 마스크 착용 “벗고 나니 홀가분” 소수 그쳐 ... 기사들 “강요 안해도 되니 좋아”

“아직은 ‘노 마스크’가 어색하고 눈치 보여요. 대중교통에는 여러 사람이 몰리니 코로나 감염 걱정도 있고, 요즘 미세먼지도 심하니 그냥 마스크 쓰고 버스 타려고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20일 광주 시내 버스와 택시, 지하철에서 만난 시민들은 아직 대다수가 마스크를 쓴 상태였다.

2020년 10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지 2년 5개월 만의 해제지만, 시민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남아있으며 불안한데다 다른 사람 눈치가 보이고, 최근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등 이유로 쉽게 마스크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었다.

20일 광주시 서구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강수진(여·23)씨는 평소처럼 마스크를 쓴 채로 나주행 버스에 올랐다. 강씨는 “혹시나 방심했다가 코로나19에 걸릴지 몰라 마스크를 벗지 못하겠다”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닐 생각이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곳에서 만난 김모(30)씨는 마스크를 훌가분하게 벗어던지고 버스를 탔다. 김씨는 “마치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다”며 “당당하게 마스크를 벗고 버스를 타니 숨쉬기도 편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어 좋다”고 웃었다.

김운명(22)씨도 친구를 만나러 충장로로 가는 길에 마스크를 벗어 손목에 걸어둔 채로 버스에 올랐다. 김씨는 “비염이 심해서 그동안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타는 게 답답하고 괴로웠는데, 이제 버스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되니 상쾌하다”며 “아직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없는데, 다행히 종식되는 분위기라 걱정 않고 마스크를 벗었다”고 말했다.

호흡기 질환 때문에 불편했던 마스크를 벗어던져 훌가분하다는 이도 있었지만, 반대로 호흡기 질환 때문에 쉽사리 마스크를 벗지 못하겠다는 이도 있었다.

두암동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탄 A(73)씨는 “호흡기 건강이 좋지 않은데 그동안 마스크를 쓰면서 아픈 것도 줄었고 걱정도 줄었다”며 “요즘 미세먼지도 심하니 당분간은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탈 생각이다”고 말했다.

지하철 승객들 또한 대다수가 마스크를 벗지 못한 채였다. 이날 오전 상무역에서 출근 지하철을 탄 김모(31)씨는 “오늘부터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길래 마스크를 집에 두고 출근했는데, 지하철 승객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어 당황스러웠다”며 “괜히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첫날인 20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종합버스터미널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다른 승객들이 마스크를 쓰라고 눈치를 주는 것 같아 불편한 마음으로 출근했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건 버스기사 및 택시 기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은 아직 마스크를 벗고 일하기엔 눈치가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택시기사 정찬주(63)씨는 “오후 1시쯤부터 3시간정도 운전하면서 손님 6명을 태웠는데,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며 “분위기가 이리나 나오면 선블리 마스크를 벗고 운전하지는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운전하는 게 익숙해지

기도 했고, 혹시 손님에게서 감기라도 옮기지 모르니 일단은 마스크를 계속 쓰고 일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광산구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차환선(67)씨는 “20일 하루 300여명 승객들이 버스를 탔는데, 그 중 마스크를 벗은 사람은 3-4명 수준이었다”며 “그래도 마스크를 안 쓰고 버스를 타려는 승객에게 ‘마스크 써 달라’고 싶은 소리 할 필요가 없어진 것만으로도 부담감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청소년 문신 제거 지원 광주 북구 1인당 최대 200만원

광주시 북구가 광주 자치구 최초로 청소년 문신 제거 사업을 추진한다.

20일 북구는 흉터·문신 등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해 ‘청소년 흉터·문신 제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북구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9세~24세 청소년과 기관·시설 등에서 추천한 청소년이다.

북구는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및 보호자는 북구청 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신 복구정장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담기관,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희희 기자 strong@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전남 다문화학생 1만명 ...맞춤 교육 강화

1만1367명으로 5.29% 차지 ...도교육청, 한국어·이중언어 교육

전남지역 다문화 학생이 1만 명을 훌쩍 넘은 가운데 교육청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2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학생 중 다문화 학생 수는 1만1367명으로 5.29%를 차지했다.

전체 학생 수는 지난 2018년 22만496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19만9630명으로 감소했지만, 다문화 학생은 같은 기준 9789명에서 1만1367명으로 16%나 증가했다.

다문화 학생 가운데 초등학생이 65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738명, 고등학생 1089명, 유치원생 970명, 특수학교 50명 등이다. 이 중 국내 출생이 95%,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5%를 차지했다.

다문화 학생의 국적은 베트남이 5374명(47.28%)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 1820명(16.01%), 중국 1669명(14.68%), 캄보디아 877명(7.72%), 일본 639명(5.62%), 몽골 219명(1.93%), 태국 222명(1.95%), 중앙아시아 146명(1.2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여수와 순천이 각각 1071명으로 가

장 많았으며 목포 911명, 나주 836명, 광양 821명, 영암 711명, 해남 567명, 화순 518명, 무안 481명, 고흥 457명, 장성 448명, 영광 412명 등이며 구례가 195명으로 가장 적었다.

전남교육청은 이날 정책 브리핑을 열고 다문화 학생 등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교육 강화,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 국제 역량 중심 학생 성장 지원, 지역 사회 기반 지원체제 강화 등을 포함한 ‘전남 다문화 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유·초·중·고교의 학교 교육활동에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온라인 학습콘텐츠, 이중언어 전자책 등 교과 보조교재를 개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국제교육원과 대학을 연계해 교원-이주 여성 대상 한국어 강사 양성과정 연수도 운영할 계획이다. 학부모의 한국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다문화 가정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족센터·마을학교 등에서 관련 교육을 지원한다.

김정희 전남도교육청 정책국장은 “전남의 모든 아이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숙한 교육환경 속에서 포용성과 다문화 감수성을 갖춘 국제적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윤 정부 교육 포기 정책 규탄한다”

교육대생들 시국선언 “교대사대 통폐합·교사 정원 감축 반대”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대 학생들의 규탄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는 20일 오후 1시 30분께 광주교대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예비교사로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포기 정책’을 규탄한다”며 “심화된 교육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총학생회는 ‘초등학교 의대반’까지 나오고 있는 교육 경쟁이 심화된 현실을 지적하며 사교육비 증가 폭이 가장 큰 초등 교육과 소득에 따라 5배까지

“비위 교사 교장 임용 취소하라”

광주 시민단체 반발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광주시교육청이 비위와 관련된 교사에게 교장 자격을 승인해 줬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교육시민단체 연합인 광주교육시민연대(시민연대)는 20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4대 비위(성적조작, 성비위, 폭력, 금품수수)자를 교장으로 임용한 사실을 취소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2월 교원양

성위원회를 열고 교원 4대 비위에 연관된 A씨 등 17명의 사립고교 교장 자격 심사를 통과시켰다”면서 “광주시교육청이 4대 비위자가 학교관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불문율을 스스로 깨버려 A씨가 3월 1일부터 교장으로 임용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시험문제 유출로 문제가 된 학교의 부장교사로 광주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거쳐 징계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시민연대의 설명이다.

이후 A씨의 고등학교는 2021년과 2022년 및

차이 나는 월평균 사교육비를 예시로 들었다.

이어 “현 정부는 교대와 사대를 통합하고 교사 정원을 감축하며 합법적으로 비정규직 교사를 채우는 정원 외 기간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교사와 학부모 등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교육전문대학원까지 세우려고 하는 등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시국선언은 기자회견과 대자보 형식으로 나눠 전국 10개 교육대학교 총학생회와 함께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따라 A씨를 교장·교장 승진을 추진 했으나 광주시교육청은 특별감사 처분 미이행을 이유로 교장·교감 등 자격 부적격 처분을 내리고 거부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올해 1월 다시 A씨의 고등학교는 A씨를 교장자격인증검정대상자로 추천했고 2월 열린 광주시교육청 교원양성위원회에서 A씨의 자격 심사를 통과시켰다.

이에 시민연대는 “이정선 교육감 체제에서 A씨에 대한 징계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자격을 인정했다”면서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했지만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이 형식만 내세워 변명하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